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과 논점에 관한 연구

민 경 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수석연구원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논점 |
| II. 경제통합의 유형과 EU 통합의 시사점 | V. 결론 |
| III.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 | 참고문헌 |

Key words(중심용어): 동아시아(East Asian FTA),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한중일(Japan, China), 아세안(ASEAN)

국 문 요 약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말부터 본격화된 EU, 북미지역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정치나 안전보장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적은 것 같다. 문제는, 경제통합의 방향성이다. 「유럽(EU) 형의 통합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참가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실현되는 것인가」,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등 주변국 관계는 어떻게 할까」 등이다.

EU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EU처럼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소련과 같은 공통의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적 공통성과 전통이 유럽보다는 약하다는 측면이다. 셋째, 정치 시스템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내에는 민주국가도 있고, 군부독재국가도 있어 유럽과 같은 문제해결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의 참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시장이 클수록 국제 분업 효과가 커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양성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SEAN+3가 가장 이상적인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추진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망과 시

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통합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는 중·일의 경제 대국이 있고,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일 모두 동아시아의 패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추진을 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경제통합 성패의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향후 문제의 핵심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하여 우리의 對동아시아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동아시아는 통화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왔다. 이 지역의 고도성장은 일본을 선두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이른바 동아시아 NIEs가 주도해 왔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및 NIEs의 직접투자에 힘입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그 뒤를 따랐다. 90년대부터는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 『The World in 2020:Towards a New Global Age』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화와 경제자유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1세기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중국 8%, 인도네시아 7%,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6.9%로 전망되고 있어 EU, NAFTA의 2.8%, 남미의 5.3%에 비해 고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EU, 북미지역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정치나 안전보장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적은 것 같다. 문제는, 경제통합의 방향성이다. 「유럽(EU) 형의 통합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참가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실현되는 것인가」,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등 주변국 관계는 어떻게 할까」 등이다.

동아시아에서 제도적인 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97년 말 전개되었던 통화위기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 됨으로써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ASEAN 10개국과 한·중·일간의 합의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구축을 기본으로 하는 「쿠알라룸푸르 선언」¹⁾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1) 주요 내용은 ①아세안+3회의의 연례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적 지침 마련 △2007년 제2차 동아시아 협력 공동성명 발표로 공동체 건설 방향 설정 ②지역 내 협력과정 보완 ③개별격차 해소와 아세안 통합 계속 지지 ④'우리'라는 인식 확대를 위해 국민 간 교류 확대 ⑤동아시아 국가 내 학생 학자

정치, 경제, 안보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것을 천명하고 ASEAN+3가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일본은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ASEAN+6을 제안 하면서 통합에 대한 주도권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최근 국내연구는 조정란(2006), 손병해(2007), 강보경(2008) 등이 있다. 조정란(2006)의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공동체구축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정리하였다. 손병해(2007)의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의 문화적 기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교적 가치의 경제적 의의를 살펴보고 그것이 주는 경제통합의 함의를 검토 하였다. 강보경(2008)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국외연구로는 일본이 가장 활발한데 渡辺利夫(2004, 2005), 深川由紀子(2005)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경제통합의 모델인 EU 통합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진의 움직임과 특징을 분석하여 경제통합의 방향성을 전망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란, 원칙적으로 ASEAN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합한 16개국(이른바 ASEAN+6)로 한다.

II. 경제통합의 유형과 EU 통합의 시사점

1. 경제통합의 유형

「경제통합」이란, 물건이나 사람·자본등의 이동을 자유화해, 지역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역 통합」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용되지만, 여기에서는 「경제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제통합에는, <표 1>과 같이 5 단계가 있다. 우선, ①역내의 관세나 수량 제한을 철폐하는 「자유 무역 협정(FTA)」의 단계가 있고, ②역외지역에 대한 관세를 동일화하는 「관세 동맹」, ③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공동 시장」, ④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경제 동맹」, ⑤초국가 기관을 설치해 경제정책을 통일하는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통합이 진행된다. 이 유형은, EU의 통합 과정에 비교적 잘 들어맞는다. EU는, ②의 관세 동맹으로부터 ③의 공동시장단계를 거쳐, 일부 가맹국이 공통 통화 유로를 도입해, 금융정책을 통일하고 있다. 학자 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④의 경제 동맹단계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²⁾

이 5 단계는, Balassa(1962)의 분류에 근거한다. 다만, 이 단계론이 발표된 것은 1962년으로, 그 후 진행된 실제 경제통합이, 반드시 이 분류에 들어맞지 않는 면도 있다. 전통적인 FTA는 물품의 무역 자유화가 대상이었지만, 최근의 FTA는, 서비스 무역, 투자, 인적자본의 이동, 지적재산권등의 폭넓은 내용을 포함해, 신세대 FTA라고도 불린다.³⁾ 이러한 새로운 요소 가운데, 인

연구자 예술인 언론인 젊은이 등의 교류확대로 지식공유 촉진 ⑥지식인 싱크탱크회원 종교인 학자 간 정례 교류 등이다. 또 정치·안보, 경제, 금융·투자, 사회·문화에 걸친 협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출범 가능성도 전망됐다.

2) 浦田秀次郎(2005a), p.27.

적자본의 이동이나 투자 자유화는, 관세 동맹을 뛰어넘어 공동시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이 통상정책에 활용하는 경제연대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⁴⁾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세대 FTA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표 1>의①,②,③의 순으로 통합이 진행될수록, 통합의 정도가 강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ASEAN는, FTA인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왔고, 그 이외에도 각종의 공동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총체적인 통합도는, 관세 동맹인 남미 남부공동시장(MERCOSUR)보다 낮은 수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 각지의 경제통합을 보면, EU와 같은 결합도가 높은 통합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FTA체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FTA라고 해도, 그 내용이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FTA는, 무차별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WTO 협정의 예외로서 협정 제 24조에 의해,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는 것,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것, 등이 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⁵⁾ 그러나, 개도국은 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⁶⁾, 개도국끼리의 FTA의 경우는, 자유화 수준이 낮은 완만한 협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대상 분야는 폭넓게 고려되는 경향에 있지만, 협정에 따라 크게 다르다.

<표 1> 경제통합의 유형

경제통합의 유형		내용	사례
경제통합의 前단계	지역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과제 대해 협의하여 협력의 틀을 만들 협의기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모든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협력과 각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원조성격의 협력도 있음 	APEC ASEAN+3
	경제통합 5단계	① 자유무역협정(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FTA 신세대 FTA(EPA)
② 관세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무역의 자유화 	MERCOSUR
③ 공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FTA에 서비스, 투자, 인력의 이동, 지적재산권보호 등 폭넓은 요소를 포함 	EU
④ 경제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지역에 대해 공동관세 설정 	EU
⑤ 완전한 경제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자본등 생산요소의 이동제한 철폐 · 경제정책조정 · 超국가관을 설치 경제정책을 통일 	

출처) Bela Balassa(1962), p2.

3) 木村福成(2003), p.26-27.

4) EPA는 FTA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조약체결국간에 원활한 경제거래, 경제제도의 조화, 협력촉진 등 시장제도와 경제활동을 일체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 대상 분야가 폭넓은 협정이다(일본의 FTA전략, 외무성 홈페이지)

5) 한편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ATS)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6) 1979년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수권조항에 의함.

<표 1>에서는, 「경제통합」에 이르기 전의 단계로서 「지역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협력」이란, 역내국이 에너지, 환경, 금융등 특정 과제에 대해 협의해,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수평적인 협력 기반으로서 ASEAN+3 정상회담과 같은 협의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통합에서는, 자유화에 의해 불이익을 입는 업계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합의가 어렵지만, 지역 협력의 경우, 특정 분야에 국한된 피해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실현이 용이하다.⁷⁾

2. EU 통합의 시사점

EU의 경제통합의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은 동아시아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유럽의 경제통합 필요성을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 첫째, 전쟁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염원이다. 20세기초 영국을 비롯한 유럽대륙은 금융·경제의 국가간 상호의존이 매우 밀접한 상황으로 전쟁의 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할 정도였다.⁹⁾ 그러나 2차세계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경제통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 유럽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통합도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둘째, 아담스미스적인 경제관념이 유럽경제 통합의 배경이 되었다. 부(富)의 분배는 분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고도의 분업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보다 많은 부가 형성되며 국가번영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셋째, 동서냉전체제라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였다. 소련 및 동구권과의 정치적 대립상황에서 군사적으로는 NATO를 통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서유럽을 하나로 묶는 공동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서유럽에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독일의 금리정책이나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로 경제권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경제통합을 필요로 하는 4가지 필요성과 함께 실제 통합을 가능하게 한 3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인식 이었다. 서유럽의 리더인 양국의 주도적인 움직임에 이끌린 중소국이 통합에 동참하는 형식이 되었다. 둘째,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이 매우 유사한 점이다. 유럽국가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유럽평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비교적 용이한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문화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합이 보다 용이하였다. 10) 셋째, 경제적구조도 매우 유사하여 통합후

7) 浦田秀次郎(2005b), p.2-3.

8) 阿部茂行(2007), p.2-3.

9) 유럽대륙 내에서 대규모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Norman Angel(1911)의 저서 『The Great Illusion: a Study of the Relation of Military Power to National Advantage』이 당시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10) 예를 들어 기독교 문화권인 우크라이나는 EU가맹신청 4년만에 가맹국이 되었으나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의 경우는 20년이 걸렸다.

의 국가간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EU의 사례와 비교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경제통합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은 우선 EU와 같은 경제통합의 성공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통화·금융위기의 경험이다. 97년에 일어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국가간 협력을 이전보다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전체에 대한 경제위기는 이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한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동아시아에 형성된 일본, 중국, 한국계 다국적 기업의 생산네트워크이다. 전자·전기 분야에서는 FTA체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낮은 관세율에 의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경제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도 몇가지 존재하고 있다. 첫째, 한-중과 일본의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식의 차이이다. 특히 일본 수상 및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한-중-일 간의 정치 문제를 자극하는 주요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문제이다. 한국의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미-일 군사동맹은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남아있고, 중-일 대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유럽과 같은 경제통합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중-일 두 경제대국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EU의 상황과 비교 하였을 때,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EU처럼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소련과 같은 공통의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적 공통성과 전통이 유럽보다는 약하다는 측면이다. 셋째, 정치 시스템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내에는 민주국가도 있고, 군부독재국가도 있어 유럽과 같은 문제해결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의 참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시장이 클수록 국제 분업효과가 커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SEAN+3가 가장 이상적인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¹¹⁾

EU가 성립되었을 때와 지금의 동아시아의 사정이 매우 달라 지역통합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다음의 몇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다국간 경제협력기구인 WTO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되고 각 지역경제가 다른 경제권에 대해 보수적인 통상정책을 펼칠 경우, 동아시아의 내부결속력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는 세계통상환경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 주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극단적인 다자주의의 퇴조가 아닌 다자주의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지역주의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다. 단지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국가별로 보수주의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EU통합에서도 보였다. 프랑스에서 유럽통합의 정서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을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점은 주변의 중소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와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11)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EC) 창설을 제창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前수상은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광역권의 경제공동체추진을 주장하였다.

Ⅲ.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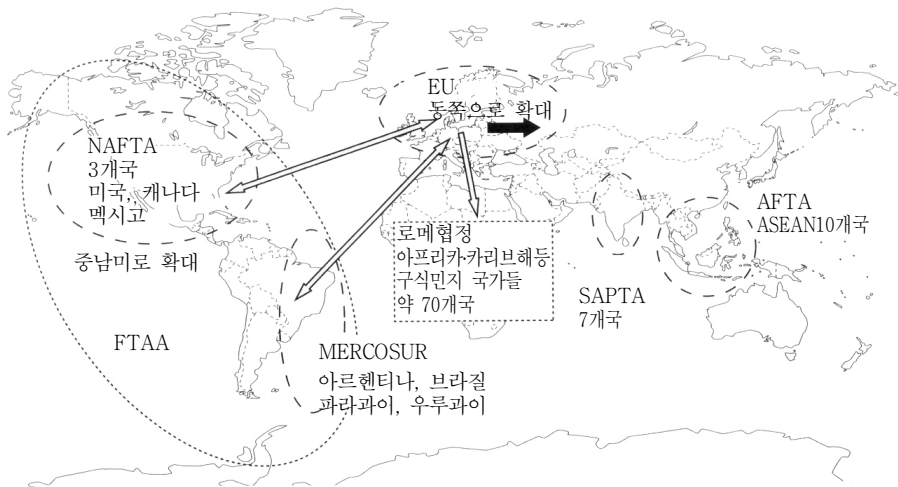
1. 배경과 역사

동아시아에서는 1990년대 까지, 경제통합 대한 움직임이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역내 정치·경제·문화·종교·민족의 다양성,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 경제통합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것, 미국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주적인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역 협력 기구로서는, 1989년에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APEC)가 있다. 멤버는,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를 포함한 21개 국·지역이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경제·기술 협력 활동이 중심이다. APEC는, 참가국에 의한 자주적인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적인 경제통합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 1994년에 채택된 보골 선언에서는,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자유화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 이것이 실현되면, 실질적으로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만, 이 목표 달성이 참가국의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고, 또 국가별 추진일정도 합의되어 있지 않다.

순수하게 동아시아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통합으로서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前수상이 1990년에 제창한 「동아시아 경제 협의체」(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 구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이 구상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림1] 세계의 주요 지역경제 통합의 움직임



출처) 今井宏(2003), 임천석 외(2004a)에서 재인용

2. 지역 협력 현황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단계인 지역 협력이 진전된 계기는, 동아시아 통화위기(Currency and Economic Crises)의 발생이었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한 통화 위기는, 주변 각국으로 확대되어, 막대한 경제 피해를 주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APEC는 유효한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신에 실효성을 가진 것은,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 협력이었다. 이 경험은, 동아시아 각국에, 지역단위 협력 관계를 구축의 강한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¹²⁾

우연히도 동아시아 통화위기와 때를 같이 해 시작된 ASEAN+3(한중일)의 협의체추진이 지역협력의 유력한 기반이 되었다. ASEAN+3은, 통화위기 직후의 1997년 11월, ASEAN 설립 30주년 정상회담에, 한·중·일 정상이 초대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당초는 통화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의제가 중심이었지만, 그 후, 보다 광범위한 협력이 논의되게 되어, 1999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현재는, 정상회담이외에, 재무, 경제, 노동, 농업, 관광, 에너지, 환경의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장기적인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동아시아·스터디·그룹」의 검토를 통해 각종 분야에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 ASEAN+3을 계기로, 한·중·일 3개국 협력 구조도 탄생했다. 1999년 제3회 ASEAN+3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중·일 3개국 정상 회담이 실현되어, 그 후, ASEAN+3과 함께, 각종 분야에서의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2003년 10월에는, 「한·중·일 삼국간 협력 촉진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ASEAN의 지역 협력이 전통적으로 정치 주도인데 비해, 한·중·일은 지역 협력은 행정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초 중·일, 한·일간 정치 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에, 삼국간의 금융·환경 분야 협의는 계속 진행되었다.

3. 동아시아의 FTA 교섭 현황

1990년대 이후 국제환경변화와 개발전략변화에 따라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FTA 체결건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¹³⁾ 그 배경으로는 ①미국, 유럽이 각각 NAFTA(1994년 발효), EU(1993년 발족)를 추진하는 등 주변국과의 무역·투자 자유화추진이 활발해 졌고, ②NIEs나 ASEAN이 경제개방을 통한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속에 칠레, 멕시코등 신흥국이 FTA를 활용한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였고, ③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FTA에 적극적인 자세로

12) 1997년 7월에 통화위기가 발생한 이후, 일본은 대규모의 아시아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98년 10월에 발표된 「신 미야자와(宮澤) 구상」이다. 신 미야자와 구상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 자금원조로서 엔차관(ODA) 및 일본 수출입 은행(현재 국제협력은행)이 실시하는 언타이드 론(Untied loan, OOF) 등 150억 달러, 경제개혁 과정에서의 단기자금 수요 준비로서의 150억 달러 합계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2008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151건 이상이다.

정책을 전환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더욱 주요한 원인은

1999년 WTO의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다자간 교섭에 난항이 거듭되고 새로운 라운드의 교섭방식과 범위를 둘러싸고, 참가국간의 견해가 크게 분열해, 토의 내용에 대해서도 선진국 대 선진국, 선진국 대 개도국 등, 테마에 따라 대립구조가 변화하고, 사태 수습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실제 90년대 후반까지 동아시아는 FTA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2002년 11월에 일본-싱가포르 FTA 가 체결될 때까지는, ASEAN 자유무역지역(AFTA)이 유일한 FTA였다. AFTA 는 1992년에 당시의 ASEAN 가입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6국에 의해 체결되었다. 90년대 후반에는, 후발 ASEAN 가입국(통상 CLMV로 불린다)인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도 가입해, 현재는 1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AFTA 는 발족으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0-5%에까지 인하한다고 하는 목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준수하고 있지 못하지만, 관세인하는 모든 가입국에서 추진되었다. 다만, 가입국간의 무역에 관한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역내 무역은 그만큼 확대되고 있지 않다. 실제, 전

<표 2> 동아시아 각국의 주요한 FTA

발효 또는 타결	교섭 중	연구단계
방콕협정(76년)		
AFTA(92년)	한국-일본	한국-중국
싱가포르-뉴질랜드(01년)	한국-캐나다	한국-호주
일본-싱가포르(02년)	한국-EU	한국-페루
일본-멕시코(04년)	한국-인도	한국-터키
싱가포르-미국(04년)	일본-호주	일본-중국
한국-칠레(04년)	일본-인도	중국-인도
중국-ASEAN(05년)	태국-인도	ASEAN-EU
한국-싱가포르(06년)	태국-미국	
일본-인도네시아(06년)	싱가포르-캐나다	
일본-말레이시아(06년)	싱가포르-멕시코	
일본-필리핀(06년)		
일본-칠레(07년)		
일본-태국(07년)		
한-ASEAN(07년)		
한-미(07년)		
중-뉴질랜드(08년)		
중-싱가포르(08년)		

주) 주요 대표적인 현황중심으로 정리
출처) 각국 외교통상 관련부처 홈페이지

14) 經濟産業省(2008), p.405.

15) 임천석외(2004b), p.17. 참조.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AFTA 역내의 무역의 비율은 1995년 1.4%에서 2003년까지 1.4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또, 이 기간 중 AFTA 의 총수입에 차지하는 역내 수입비율은 22%에서 27%로 상승했지만, 수출비율은 23%에서 22%로 감소하였다.¹⁶⁾ AFTA 설립의 배경에는, 중국 경제가 대두하는 상황속에서, 대내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ASEAN 각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통합을 통해 큰 시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ASEAN 각국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ASEAN은, AFTA 이외에도 다른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FTA(ACFTA)이다. 중국-ASEAN FTA는 2001년 11월 부르네이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서 '10년내 FTA체결'을 합의한 것을 기초로 2002년 11월 「ASEAN-중국간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합의」 체결하게 되었다. 이 합의에서는 양자간 FTA구축에 관한 합의를 중심으로 투자촉진과 그밖에 경제협력을 언급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¹⁷⁾ ACFTA(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는 2005년 1월 발효되어 7월 20일 관세인하를 시작으로 7000개 품목이상의 관세가 인하되었다. 중국과 ASEAN6(부르네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은 2010년, 신규가맹국(CLMV)은 2015년 관세를 철폐해 FTA를 실현할 예정이다. 자동차, 텔레비전 등 많은 중요한 제조제품이 예외(민감품목)로 되어 있어 추가 협상을 통해 예외 품목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ACFTA에서는 민감협상품목 이외에도 조기자유화조치(Early Harvest)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ASEAN의 주력상품인 열대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관세인하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SEAN는 일본이나 한국과도 FTA 교섭 또는 체결을 하였다.

일본은 WTO에 의한 다자간교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대협정)¹⁸⁾를 활용한 다층적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2002년1월 체결한 「일-싱가포르 경제연대협정」은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상호인증(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¹⁹⁾ 과 지적재산협력 등을 통해 원활한 무역을 꾀하는 한편 서비스무역, 투자자유화, 전자상거래관련제도, 인적교류까지 포함한 폭넓은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2002년 체결한 이후 동아시아 지역국가들과 2국간 , 다자간 FTA교섭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04년 12월 FTA추진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한 이후²⁰⁾ 2006년 책정된

16) AFTA 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특혜관세제도(GSP)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관세 면제나 특혜관세의 적용에 필요한 절차의 복잡함이나, 기술적 기준에 대한 공통된 시스템이 없다는 비관세장벽의 존재가 역내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7) 기본합의서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내투자확대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제고해 보다 큰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있다. 둘째, ASEAN 역내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ASEAN 신규가맹국에게는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FTA의 역할은 최종적으로는 지역 및 글로벌적인 자유화촉진으로 궁극적으로는 WTO와의 정합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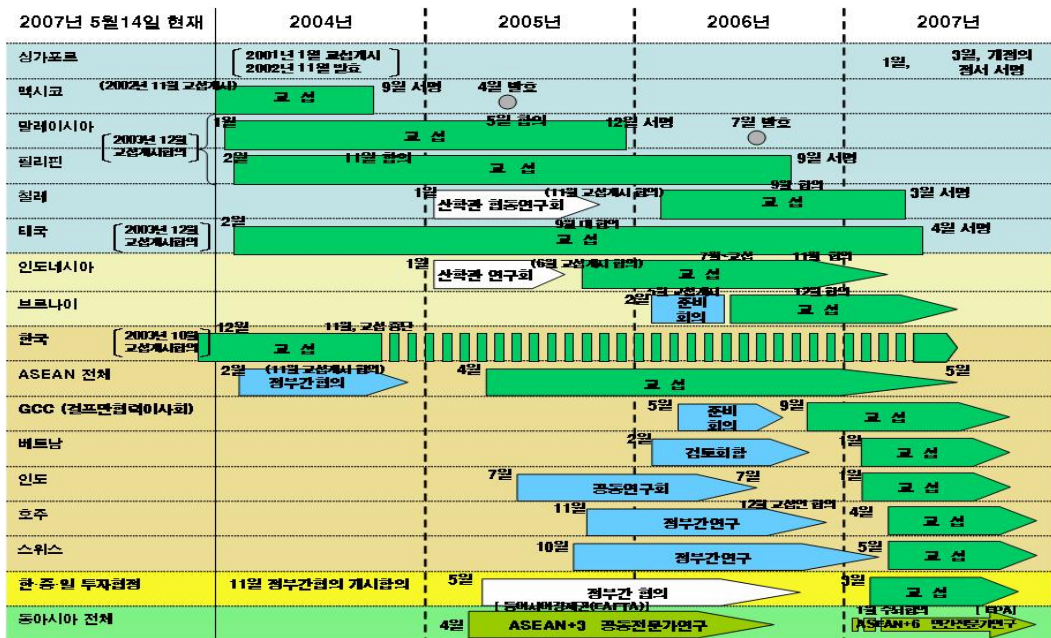
18) 경제연대란, FTA 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조약체결국간에 경제거래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조화·협력 촉진 등 시장제도와 경제활동을 일체화 시킨 것으로 폭넓은 대상 분야의 협정.

19) 특정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상호 인정을 말하는데 일본은 EU, 싱가포르와 상호인증 협정을 체결하였다.

20) 「今後の經濟連携協定の推進についての基本方針」平成16年12月31日。

FTA추진공정표에 따라 적극적·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FTA는 우선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FTA가 2006년 조인되었으며 일-태국 FTA는 2004년 협상을 시작해 2007년 4월 조인하였다. 일-인도네시아 FTA는 2005년 협상을 시작해 2006년 11월 합의한 상태이다. 여기서는 천연가스, 석유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로서 에너지 분야의 투자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분석에 따르면 동아시아와의 FTA체결에 의한 경제효과(ASEAN+한중일의 경우)는 일본은 GDP가 약 4.2조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¹⁾

[그림 2] 일본의 FTA/EPA 추진 일정



출처) 經濟産業省(2007), p.227.

중국이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최근 WTO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 적극추진하고 있는 FTA의 주도권을 확보 하려는데 있다.²²⁾ 중국은 1986년 WTO가입신청을 한 지 15년만에 회원국이 되었으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주요선진국 중심의 WTO체제를 개도국의 맹주로서 변화시키려 해도 다자간협약의 한계에 부딪치고 WTO자체의 기능저하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반해 FTA추진에 있어 아시아의 현황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지연

21) 經濟産業省(2006) 『グローバル經濟戰略』 p.34-36.

22)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전략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 EU등 선진시장과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 FTA추진, 또 하나는 적극적인 내외직접투자 장려 정책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국내투자유치 중심의 중국기업을 WTO 가입이후 날로 증가하는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되고 있어 아직 아시아각국의 주도권경쟁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충분히 중국의 영향력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3>에는 중국이 추진 중인 FTA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3> 중국의 FTA 진행 현황

협상단계	해 당 국 가
1단계	한국, 일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2단계	호주, 걸프협력회의(GO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아이슬란드,
3단계	홍콩, 마카오, ASEAN(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기타*	상하이 협력기구(SCO: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자키스탄)

주) 1단계- FTA 타당성 공동연구

2단계- 협상 전개 및 FTA 협정 최종합의에 도달

3단계-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되는 단계

* 공동연구는 하지 않았으나 FTA 추진에 합의한 국가

출처) 이장규 외(2006), p.31.

4. 동아시아 공동체구상

2004년부터,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는, 용어정의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EU와 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도 있고, 「지역협력의 장(場)」이라고 하는 정도의 완만한 구조를 상정한 논의도 있다. 논의 중에는 경제 이외의 사회적 측면, 안전보장 측면의 통합을 염두 한 논의를 하는 전문가도 있다. 2002년 1월, 고이즈미(小泉) 수상은, 일-ASEAN 관계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관계를 「공생(共生), 공동번영 하는 커뮤니티」로서 발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2003년 10월부터는 「동아시아-커뮤니티」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여기까지의 단계에서는 그 개념이 추상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막연히 한 지역 협력을 의미하는 수준이었다. 그 후, 2004년 9월 UN총회연설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할 의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었다.²³⁾ 또한 ASEAN+3

23) 동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나카(田中)는 다음의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중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이를 대비한 산업효율성 제고 필요성 등 미래 일본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동아시아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식량이나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싫던 좋은 중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일·중 2국간 관계 형성은 어렵기 때문에 일·중·미

을 통해서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첫 제안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1990년 12월 당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 경제 그룹(EAEC)”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구상은 GATT하의 우루과이라운드 교섭 부진, 유럽과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체 형성을 제안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강한 반대와 일본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동아시아에 있어 제도적인 협력체제 형성을 향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되어 전개되었던 동아시아 통화위기였다. 이를 계기로 ASEAN+3 정상회의가 사상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초기 개최 당시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던 ASEAN+3 정상회의가 위기의 파급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표명으로 다음해인 1998년에도 개최하게 되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던 1997년 ASEAN+3 정상회의는 당시 동아시아 여러 국가로 파급되었던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1998년 정상회의에서는 일본의 오부치 수상이 ASEAN측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차관 등을 위주로 한 총 300억 달러의 자금지원 구상을 밝혔고,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중장기 비전 모색을 위한 「동아시아 비전 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ASEAN 국가들은 ASEAN+3 정상회의를 매년 ASEAN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제안에 의해 동아시아 협력 논의 및 체제가 ASEAN+3의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ASEAN+3 체제는 정례화 되었고, 매년 연말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연중에도 수차례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추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더욱 구체화할 정책대안으로서 「글로벌 경제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ASEAN+6의 경제연대협정인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구상을 제창하였다. 또한, 동아시아版 OECD 구축을 위한 준비로서 지역공동 과제의 연구·정책제언을 위한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구상을 제창하였다. 07년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는 CEPEA 민간전문가회의 개최가 합의 되었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동년 11월 정상회담에서는 ERIA의 설립을 정식 합의 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 분석에 따르면 CEPEA에 의해 동아시아 전체의 실질 GDP는 2.11%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었다(표4 참조). ASEAN+3와 비교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것이 보다 큰 GDP 증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정비를 통해 기업이익개선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어 이러한 효과들의 상승작용으로 경제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RI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추진, 역내 경제발전격차 해소, 지속적인 성장의 실현을 주요한 정책분야로 하여 조사 분석·정책연구 등의 결과를 동아시아 정상회담 등 정책당국자에게 제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라는 트라이앵글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중국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에 유포되고 있는 내셔널리즘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내셔널리즘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정란(2006), p285-286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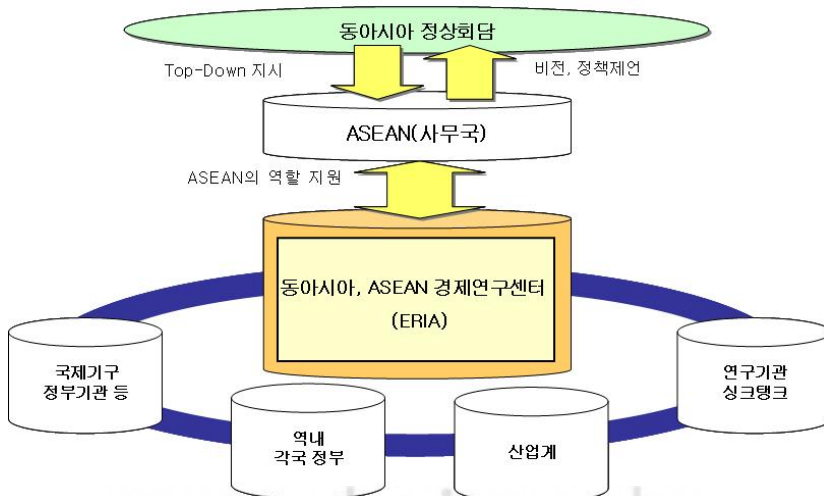
<표4> 동아시아의 FTA 경제효과

		ASEAN+3 FTA	ASEAN+6 FTA
한국		3.55	3.71
일본		0.44	0.54
중국		4.72	4.84
A S E A N	인도네시아	3.94	4.14
	말레이시아	8.62	9.00
	필리핀	6.28	6.52
	싱가포르	4.24	4.42
	태국	7.02	7.32
	베트남	9.67	9.92
	기타 동남아시아	2.91	2.95
호주		-0.09	1.35
뉴질랜드		-0.06	1.87
인도		-0.10	3.45
ASEAN 전체		5.67	5.89
ASEAN+3		1.93	2.05
ASEAN+6		1.68	2.11

출처) 經濟産業省(2008), p.416

[그림2]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 구조

동아시아 경제통합추진을 위한 지적 기여



출처) 經濟産業省(2008), p.438.

IV.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논점

1. 통합의 수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논점의 하나는, 경제통합의 수준을 EU와 같은 결합력이 높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FTA체결 수준을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인 관계가 긴밀해지면, 인적자원의 이동이나 사회·문화측면까지 포괄하는, 보다 심도 있는 통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필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공동체 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측에서는, 통합은 FTA를 중심으로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²⁴⁾ EU 통합과 자주 비교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그 확장판인 미주 자유무역지역(FTAA)이, 반드시 EU형의 통합 심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해보면, 동아시아에서도 FTA의 지역확대 수준의 통합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중요한 것은, 만일 화폐통합이나 한층 더 진전된 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 실현은 가능성은 별개로 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화폐통합의 실현에 대해, 일본의 전문가 들은 20~ 40년 후의 일로 전망하고 있다.²⁵⁾ 따라서 당분간 동아시아 공동체의 논점은, 경제통합의 첫번째 단계인 FTA를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이다. 동아시아의 현재 상태로서는, 이 FTA 마저도, 실현이 용이하지 않다. 일본, 한국과 같은 선진 경제국과 캄보디아 등 ASEAN의 후발 가입국이, 가까운 장래에 FTA를 맺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²⁶⁾이 때문에, 많은 논자들은 가능한 국가부터 분야별 지역협력을 구축해 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FTA는 일본의 통상전략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금융, 에너지, IT, 인재육성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을 포함한 신세대 FTA(EPA)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 참가국에 관한 논의

「동아시아」라고 했을 경우에, 지리적으로 어디까지를 그 범위로 하는지도 논점의 하나이다. ASEAN+3가 핵심 멤버가 되는 것에 대하여는, 반론은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 주변국의 참가 여부다.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을 진행한다면, 무역이나 투자면 에서 관계가 깊은 대만과 홍콩도 포함해야 할 것이 라는 지적도 많다.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로 정치적인 어려움

24)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渡辺(2005), p.53. 참조.

25) 榑原英資(2005), p.25.

26) 일본의 경우는 FT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PA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예상되지만,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WTO나 아시아 개발은행에 가입되어 있어, 순수한 경제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준 멤버나 옵서버로서 참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나 몽고에 대해서도, 향후 조건이 갖추어지면, 참가국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가국 관련해 논의할 대상으로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있다. 2002년 1월에 고이즈미 수상이 발표한 「공생(共生), 공동번영 하는 커뮤니티」 구상에서는, ASEAN+3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멤버로서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2003년의 「통상백서」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경제면에서의 상호의존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동아시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동아시아를 포함한 경제관계의 급변, 특히 중국, 인도의 적극적인 FTA 등이 일본을 자극하면서 일본은 2006년 ASEAN+3회의를 통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ASEAN+6로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향후 경제통합의 양상은 한-중-일-인도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3. 통합의 프로세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ASEAN+3의 각국은, 개별국가 단위로 2국간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1개로 정리해 가는 프로세스는,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예상된다. 다만, 경제환경변화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단일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는 없다. 복수의 시나리오가 절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 ① 「ASEAN+1」 FTA의 통합: 일본-ASEAN, 중국-ASEAN, 한국-ASEAN 의 3개의 「ASEAN+1」 FTA가 완성된 다음의 단계에서 이것들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3개의 FTA가 내용이 상이하게 선행되면 그것을 통합할 때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3개의 「ASEAN+1」 FTA는, 각각 체결 또는 교섭에 들어가, 현시점에서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② AFTA와 한·중·일 FTA의 통합: 제2의 시나리오, 한·중·일FTA를 체결해, ASEAN 자유무역지역(AFTA)과 통합하는 안이다. 한·중·일FTA에 대해서는, 3국이 공동 연구를 하였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교섭의 예정은 없다.²⁸⁾ 이 때문에,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ASEAN+1」 통합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도, 한·중·일FTA가 필요 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²⁹⁾

27) 경제통합의 초기의 단계에서는, EU나 NAFTA의 경우에서처럼, 우선 참가국을 정해하고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확대는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견해도 있다. APEC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여 참가국의 이해가 수렴되기 전에 참가국을 확대하면, 구심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28)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된 한·중·일FTA 연구로서 강보경(2008)을 참조

29) 중국은 한·중·일FTA에 매우 적극적이고, 이 AFTA와 한·중·일FTA의 통합안에 대해서, 중국의 연구자들은 자주 언급하고 있다.

- ③ **그룹별로 단계적인 통합:** 제 3 시나리오, 2국간 FTA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 단계부터 전체 통합 스케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국을 소득 수준등을 기초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 마다 관세철폐나 정책협조 일정을 정하였다. 제일 그룹으로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이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 가장 유의할 것은 역내국가간 경제격차이다. 그룹별로 경제격차를 최소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중·일 관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싸고 중·일 양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2001년 11월에, ASEAN와의 FTA 교섭을 개시한 이래,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관계자나, 관련연구자들은 빠른 속도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중국보다 먼저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중국의 빠른 속도에 쫓기듯이 아시아 각국과의 FTA를 추진해 왔다. 동아시아에 있어 중-일의 경제규모는 압도적으로 양국의 협력 없이 경제통합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일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양국관계가 EU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편 선제적으로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제안들도 있다.³⁰⁾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나, 패권적 의식을 염려하여 협력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의견도 있다.³¹⁾

한편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쟁관계인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중국이 통합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되거나 또는 경제통합은 실현되지 못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³²⁾ 급속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은 자명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ASEAN 경제관계만 보더라도 동아시아 주도권경쟁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³³⁾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일이 FT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중-일 FTA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아직 무역·국내산업의 보호수준이 높고 선진국과 FTA를 체결할 만큼 경제성숙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곧 중국은 동아시아 주도권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0) 小島朋之(2005), p.133.

31) 古森義久(2004), p.159.

32) 吉田春樹(2005), p.47.

33) 관련연구로 민경식(2008)을 참조.

5. 미국의 입장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생각할 때, 이 지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미국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찌기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의 EAEC 구상을 좌절시킨 것은, 미국의 반대였다. 최근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조류에 대해서는, 당시와 같은 강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미국 정부관계자로부터는, 미국 배제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연방 의원이나 연구자들은, 미국이 입을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이 표면화된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첫째 미국 스스로도 1994년 NAFTA라고 하는 경제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후 NAFTA의 확대판인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를 통해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미국도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부터 제외되는 불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급속히는 진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듯이 일본이, 미국을 옹서버 국가로서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참가제안을 하였지만, 미국측은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표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미국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포함한 APEC을 경시하거나, 일본시장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는 중·일 FTA체결은,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의 미국의 對동아시아 통상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U형 통합모델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진의 움직임과 특징을 분석하여 경제통합의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이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ASEAN은 물론이고 한·중·일 각국의 FTA 체결움직임이 주요 트렌드이다. 20세기말부터 본격화된 FTA추진은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전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인종, 문화, 정치 등 공통된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공동체형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경제단위의 통합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U 통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주체의 공통된 목표의식이다. 아직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그러한 목표의식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추진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통합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는 중·일의 경제 대국이 있고,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경제통

합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일 관계는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역사적 인식에서 커다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일 모두 동아시아의 패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추진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전략은 이미 21세기 초부터 동아시아 경제권 구상으로 표면화 되어 왔으며 최근 CEPEA나 ERIA추진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06년 이후 기존의 ASEAN+3 구도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시킴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역시 ASEAN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남아에 형성되어 있는 화교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경제통합 성패의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통상전략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국가간 지역간 FTA추진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FTA가 미국의 국익을 명백히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미국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는 미국에게 있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도 미국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동아시아는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국내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해 비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높게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일본의 움직임에 맞추어 ASEAN 이나 인도와의 FTA가 추진되고 있는 인상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거대시장을 탄생 시킬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유의하여 우리의 對동아시아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보경. 2008.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중·일 FTA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2권 1호
- 민경식. 2008.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ASEAN 경제협력과 일본의 통상전략」 『일본학보』 74권 1호
- 손병해. 2007. 「유교적 가치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국제경제연구』 13권 1호
- 이장규, 이인구, 여지나, 조현준.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천석, 민경식 편저. 2004a. 『21세기 아시아경제』 두남
- 임천석, 민경식. 2004b.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對동아시아 FTA추진전략」 『동서연구』 16권 2호
- 조정란. 2006.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일본의 입장」 『국제지역연구』 10권 2호

- 阿部茂行. 2007. 「経済統合から見たアジア」 『同志社政策研究』 創刊号
- 経済産業省. 2006. 「グローバル経済戦略」
- 経済産業省. 2007. 『通商白書2007』
- 経済産業省. 2008. 『通商白書2008』
- 小島朋之. 2005. 「東アジア共同体創設へ日中は共に主導権發揮を」 『アジア研究報告書
「日中韓・ASEAN廣域協力とFTAの可能性」』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 古森義久・深田祐介. 2004. 「日中FTAはありえない」 『Voice』 324号
- 浦田秀次郎. 2005a. 「廣域協力、FTAから共同体へ」 『日本貿易會月報』 625号
- 浦田秀次郎. 2005b. 「日中韓・ASEANで幅廣い協力含むFTAを」 『アジア研究報告書「日
中韓・ASEAN廣域協力とFTAの可能性」』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 木村福成. 2003. 「東アジアにおける自由貿易協定の意義と問題点」 『東亞』 427号
- 榊原英資. 2005. 「AMFからACUへーこれがアジア經濟統合への近道だ」 『Sapio』 17卷3号
- 吉田春樹. 2005. 「東アジアサミットは日米同盟を損なうか」 『世界週報』 84卷16号
- 渡辺利夫. 2005. 「幻想を吹き飛ばす反日地政學」 『中央公論』 120卷6号
- Barfield, Claude. (2007) "US Trade Policy: The Emergence of Regional and Bilateral Alternatives to Multilateralism", *Intereconomics 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Vol. 42, No. 5, Springer.
- Bela Balassa. 1962.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Allen and Unwin
- Bergsten, C. Fred. (2007) "Toward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Presented at a joint Conference of The Japan Economic Foundation an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n "New Asia-Pacific Trade Initiatives", Washington, D.C.
- Ogita, Tatsushi. 2002, "An approach Towards Japan's FTA Policy" APEC Study Center, IDE-JETRO.
- Shigeyuki Abe and Michael G. Plummer. 2002, "Regional Integration in Asia" Fatemi Kasrow(ed.), *The New World Order*

Abstract

Discussion and Issue o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Min kyoung-sik*

Discuss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re active. This trend began in the late 20th from the EU and North America'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in response to the movement. East Asia in the late 1990s to the actual for the FTA, it was not very active.

As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became one of agendas for ASEAN+3 Leaders' meeting since 2004. Japan has been positioned itself as a leading country in East Asia. However, the emergence of China in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have been changes. Moreover, East Asian countries began concerns ove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frequent conclusions of FTAs and China is leading th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Some of it in terms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will not be smooth. First, East Asian countries do not have a common goal. Second, East Asian countries have a lot of diversity. Third, China and Japan are expected to compete in the championship. Therefor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approached in the long-term perspective.

■ 논문접수일 : 2008 10월 9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20일

* Director of Strategy Development Team,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